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유튜브 ‘이재명 TV’ 전격 공개

- ‘우리가 직면한 현안 문제’ 주제 47분 대담 (경제·외교·환경·사회통합)

- 코로나 19 극복 :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대대적 지원해야 ... 전 세계 각국 지원 수준의 3분의 1 불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역할 : 의료 방역체계 갖추는 것이 제1과제 ... 산업 대비 통해 기회 만들어야
- 미중갈등 및 외교 현안 : 군사적 측면선 ‘한미동맹 중요’ ... 경제 등 국익 고려해 ‘양자택일’ 하지 말아야
- 탄소중립 : 과거 정부 탄소 문제 등한시 비판, 피할 수 없으면 기회 만들어야... 스위스 방식 고려 필요
- 사회양극화 :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가 해법, 분배는 새로운 성장의 틀 ... 불신 해소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절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용만 前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1부가 21일 유튜브 ‘이재명 TV’ 채널을 통해 전격 공개됐다.

이날 오전 11시 공개된 총 47분 가량의 영상에서 이 후보와 박 前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현안문제’ 를 주제로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청년 취업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비롯해 ▲미중 갈등 및 외교 현안 ▲탄소중립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회 양극화에 대한 방안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 前 회장이 경제인으로서 바라보는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며 대안을 질문하면, 이 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코로나19 극복 방안

유력 대선 후보와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과의 대담답게 대화는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개 GDP 10%가 넘는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 가급적이면 선지원 한 뒤 후 정산하거나 후에 감면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했다”라며 “우리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시켰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직접 지원 규모는 GDP 대비 4.5%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선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아래층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럴 때가 정말 정부가 필요한 시기다. 외부의 침략 또는 재난, 대규모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제1 역할인데 그 역할을 우리 국민,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한 측면이 많다”라며 “금융지원으로 견디고 있는데 이걸 미뤄준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논의는 어려운 취업시장과 청년들의 생계형 창업에 관한 대화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취업시장의 어려움으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소상공인으로 인입되면서 (자영업이) 젊은이들에게 어려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박前 회장의 현상 지적을 ‘구조적인 문제점’과 ‘산업 형태 전환에 따른 흐름’ 등 2가지 측면으로 분석했다.

이 후보는 “(고용이 되지 않다보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기록적으로 높다. ‘먹는 장사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만 믿고 자영업으로 밀려들다 보니 폐업율도 너무 높다. 누군가 망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서 또 망하는 것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보다 창업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흐름의 일부다. 혁신 창업이면 바람직하지만 생계형 창업이면 자영업 경쟁력만 높아지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라며 “1인당 노동에 대한 대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이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료방역체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공공의료’라고 소개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최고 책임”이라며 “의료방역체계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제1의 과제다.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생길 수 있는 만큼 산업으로 대비해야 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코로나 이후에 기업인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팬데믹 대응 체계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를 꼽았다.

이 후보는 “팬데믹이 일상화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국제경쟁력을 갖춰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한 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의 식구다. 가족처럼 노동자들을 대해주면 한다”라며 “과거에는 선행이었지만 지금부터는 ESG 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 공익기업, 사회적 책임 등등으로 이제는 기업이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됐다. 조직 측면에서 배려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중갈등 및 외교현안

외교 분야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외교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미중패권 경쟁 하에서 가장 시급한 외교 현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출 및 대외관계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양자택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국력으로 볼 때 양자택일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정책 결정 책임자들의 용기, 현명함,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이지만 핵과 같은 비대칭 무기 때문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방 상황에 언급하면서 “군사안보 문제를 위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고 선택의 여지조차 거의 없는 만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택할 수 있을 때 고민이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 문제, 소위 안보, 질서, 민생 세 가지다. 수출, 대외관계에 있어 미·중이 모두 중요한데 그 둘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수 있다. 양자택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라며 “지금은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종합 국력 7~8위 정도로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낼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용기, 현명함, 결단이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 정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국제적인 합의는 국익에 관한 문제는 정쟁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보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는데 이익이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한 정쟁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탄소 중립 위기인가 기회인가?

탄소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보수 정권 당시 탄소중립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탄소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최대치 대비 40%를 줄인다고 정했는데 사실은 매우 어렵다. 기업들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실 맞는 말”이라며 “원래 30%, 25%, 이러다가 얼마 전에 파리기후협약 때문에 40%로 확 올린 것인데 국제사회 기준으로는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탄소 발생을 줄이는 문제는 이전의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그때 녹색성장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녹색성장을 하면서 화석연료 사용 줄인다든지, 재생에너지 확대하든지, 탄소 발생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실제로는 안 했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했다”라며 “지금은 쌓이고 쌓여서 국제적 부담이 커졌는데 피할 수 없다고 본다.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탄소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탄소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위스 방식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강제 할당할 수도 없고, 결국 부담금제일 수밖에 없다. 부담금을 올리면 그만큼 감축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고통스럽다. 그래서 스위스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탄소 부담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관련 기업들의 산업 전환에 일부 지원하고, 그중 일부를 스위스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해 (탄소 부담금 부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면 산업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기술개발 지원 현장 ▲현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가초과학기술 연구 ▲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집중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는 역량이 있다. 허허벌판에서 70년 만에 세

계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에 없다”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사회 양극화에 대한 방안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양극화에 대한 시급한 처방에 대한 물음에 “단기 이익이 줄더라도 장기 이익이 더 크게 보장이 되면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들은 그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다. 그럴 때 정책결정권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양극화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역사적으로도 불공정, 불평등이 격화되면 체제 붕괴를 겪었다. 결국 대지주도 언젠가는 망한다. 그게 역사로 우리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나 국제금융경제 기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률 정체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 성장”이라며 “제일 아쉬운 것은 국제기구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국내에서만 유독 분배는 성장의 대치, 대립개념, 복지는 경제의 반대개념, 갈등 관계처럼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 수요를 늘려서 생산을 유발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을 약간 바꾸고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수요를 위한 소비 진작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자는 게 아니고 성장의 새로운 틀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와 박 前 회장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자살률이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종합 국민 자살률이 지금 십수년 동안 계속 압도적 1위인데 결국 사회안전망 부족, 희망의 부족으로 양극화, 불평등, 격차, 소외감, 배제감일 것”이라며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안전망 자체를 강화해야 하는데 악순환이 있다. 기업, 노동자, 정부 간에 서로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노동자, 정부 간 불신을 회복하는 방안으로는 기업을 부담은 늘리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후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안 쓰고 싶어 하고 정규직들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 되면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안전망이 불확실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빚으니까 극단적으로 조직 단결하게 되고 결국 기업들은 정규직을 더 안 뽑는다”라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기업이 부담을 더하겠다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반대 방향으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데 많은 대화와 양보,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유럽의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은 오랜 시간의 대화를 통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후보는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는 등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사회안전망 투자 등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박 前 회장의 지적에 대해 “불확실성은 결국 불신에서 비롯된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진영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인데 상대가 하는 건 반대하고 내가 하는 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고, 인사 채용이나 인재 등용에도 저쪽 사람은 안 쓰고, 우리 쪽에서만 사람을 찾고 결국은 이게 다시 대결 국면으로 자꾸 간다”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제3의 선택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 점들을 우리 정치권부터 용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편은 오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